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13
----------	-----

제출연월일 : 2007. 3. 30.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 안 이 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자, 분양공고 및 과태료 부과, 시·도부담 경비의 재원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 변경 등 정비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고지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 나.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다.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

3.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7. 1. 19 ~ 2. 9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납부고지) 대전광역시장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대전광역시장은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그 밖에 수입금
-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로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대전광역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세조례」 및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면)

납 부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발행번호			발행번호			발행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납 부 자	주소		납 부 자	주소		납 부 자	주소	
	성명			납 부 자	성명			납 부 자
세입과목		(관) (항) (목)	세입과목		(관) (항) (목)	세입과목		
건 명		학교용지부담금	건 명		학교용지부담금	건 명		학교용지부담금
물 건 지 주 소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 동 호	물 건 지 주 소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 동 호	물 건 지 주 소		대전광역시 구 동 번지 ()@ 동 호
금 액		원	금 액		원	금 액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대전광역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새마을금고	납부장소		대전광역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새마을금고	납부장소		대전광역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새마을금고
위 금액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입일부인			수입일부인			수입일부인
OO구청장		(직인)	OO은행 OO지점		OO구청장	OO은행 OO지점		납부자 귀하
					귀하			

(뒷면)

안 내

1. 부과근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2. 산정기준

- 가.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times 1,000$ 분의 4
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times 1,000$ 분의 7

3. 납부기한 경과후의 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납부방법

대전광역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 관내 새마을금고

5. 강제징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6.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담당자 및 문의처

- o 담당자 :
- o 문의처 : 042) -

[비고] 안내문은 납부고지서의 뒷면에 인쇄한다

관계 법령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8, 2002.12.5, 2003.5.29, 2005.3.24)

1. "學校用地"라 함은 各級學校의 校舍 體育場 및 實習地 기타 學校施設의 新設에 필요한 土地를 말한다.
2. "開發事業"이라 함은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宅地開發促進法 및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하여 施行하는 사업중 100세대 규모이상의 住宅建設用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學校用地負擔金"이라 함은 第2號에 해당하는 開發事業에 대하여 特別市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 道知事"라 한다)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徵收하는 經費(이하 "負擔金"이라 한다)를 말한다

第3條 (學校用地의 造成 開發) ①300세대(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개발사업분을 감한 세대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감한 세대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施行하는 者(이하 "開發事業施行者"라 한다)는 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수립하는 計劃에 學校用地의 造成 開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學校用地의 位置 및 규모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規定에 의한 學校施設의 設置基準등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5, 2005.3.24)

②特別市 廣域市 또는 道 教育監(이하 "教育監"이라 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施設의 設置基準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개발사업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되, 地域의 狹小로 인하여 開發事業施行者가 學校用地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開發事業施行者로 하여금 事業地에 인접한 學校用地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2005.3.24)

③開發事業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를 開發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教育監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1.28)

④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지체 없이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신설 2005.3.24)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第4條 (學校用地의 확보 및 經費의 부담) ①特別市 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인 開發事業施行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를 확보하여 이를 市·道教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市·道외의 開發事業施行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를 市·道에 供給하고, 市·道는 이를 확보하여 市·道教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19)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다만, 2천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로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가 學校用地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經費는 市·道の 一般會計와 教育費特別會計가 각각 2分の 1씩 부담한다.

⑤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市·道인 開發事業施行者는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 新設되는 初等學校 및 中學校用의 學校用地를 확보하여 이를 教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하고, 市·道외의 開發事業施行者는 당해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 新設되는 初等學校 및 中學校用의 學校用地를 造成 開發하여 市·道教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供給하되, 供給價額은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開發利益의 범위안에서 無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學校用地를 有償으로 供給받는 때에는 市·道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學校用地의 확보에 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한다.

⑥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라 함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률에서 용지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06.7.19)

第5條 (負擔金の 賦課 徴收) ①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삭제 (2005.3.2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の 賦課 徴收의 방법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④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24)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第5條의2 (負擔金の 算定基準) ①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 共同住宅의 경우에는 分讓價格을,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의 경우에는 單獨住宅 用地의 分讓價格을 基準으로 각각 賦課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の 算定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3.24)

1. 共同住宅 : 世帶別 共同住宅 分讓價格 $\times 1000$ 분의 4
2.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 : 單獨住宅地 分讓價格 $\times 1000$ 분의 7

第5條의3 (負擔金등의 强制徵收) ①市 道知事は 負擔金 納付義務者가 그 납부기한까지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日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日로 한다.

②市 道知事は 納付義務者가 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負擔金の 100분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③市 道知事は 納付義務者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負擔金 및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6條 (市 道 負擔經費의 財源) ①市 道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의 확보를 위하여 市 道の 一般會計가 부담하는 經費를 다음 各號의 1의 財源으로 調達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1.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서 賦課 徵收되는 地方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
2. 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賦課 徵收한 開發負擔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額
3.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 徵收하는 學校用地負擔金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②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第5條의3 (負擔金등의 强制徴收) ①市·道知事は 負擔金 納付義務者が 그 납부 기한까지 負擔金を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日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日로 한다.

②市·道知事は 納付義務者が 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負擔金を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負擔金の 100分の 5에 해당하는 加算金を 賦課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は 納付義務者が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負擔金 및 加算金を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徴收할 수 있다.

第6條 (市·道 負擔經費의 財源) ①市·道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의 확보를 위하여 市·道の 一般會計가 부담하는 經費를 다음 各號의 1의 財源으로 調達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1.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서 賦課 徴收되는 地方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
2. 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賦課 徴收한 開發負擔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3.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 徴收하는 學校用地負擔金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②시·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의 절차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①법 제6조제1호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 징수되는 지방세"라 함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말하며, 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00.12.20)

②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당해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도귀속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③삭제 (2000.12.20)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第3條 (開發利益의 還收) ①國家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負擔金賦課對象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서 發生되는 開發利益을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開發負擔金으로 徵收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②삭제 (1998.12.28)

第4條 (徵收金の 配分) ①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開發負擔金の 100分の 50에 相當하는 金額은 開發利益이 發生한 土地가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開發負擔金은 따로 法律이 정하는 國家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4.1.16)

②삭제 (1998.12.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귀속 讓與 또는 轉入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第5條 (對象事業) ①開發負擔金の 賦課對象인 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등으로 한다. (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 2005.12.7)

1. 宅地開發事業(住宅團地造成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工業團地造成事業

3. 삭제 (1993.6.11)

4. 觀光團地造成事業

5.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流通團地造成事業

7. 溫泉開發事業

8. 旅客自動車터미널事業 및 貨物터미널事業

9. 골프장建設事業

10. 地目變更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11. 第1號 내지 第9號와 유사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등

②第1項 各號의 開發事業의 범위 및 規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징수금의 배분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로 한다.

②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시·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시·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된다.
<신설 1996.12.31, 2006.12.1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물납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받은 토지를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0.5.10>

④시·군 및 자치구는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7.6.25>

제4조 (대상사업) ①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사항 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1997.6.25, 2006.12.15)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2의2.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

②개발사업이 제1항 각호의 지역중 2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7.6.25)

1. 제1항제1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2호의 지역의 1.5제곱미터, 동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지역의 2.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지역의 3분의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7.6.25, 2006.12.15)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로

나. 공원

다. 녹지

라. 수도

마. 하수도

바. 학교(초·중·고등학교)

사. 폐기물처리시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라 함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6.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④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말한다. 이하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한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이 된다.
- ②제1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결정·부과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별로 관할토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③특별시·광역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해당 특별시·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④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말한다)는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5조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⑤제3항에 따른 교부금은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第117條 (會計의 구분) ①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②特別會計는 法律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設置할 수 있다.(改正 1994 3 16)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년 4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I.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30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7년 4월 2일
3. 상 정 일 자 : 제1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 4. 13)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 안 설 명 요 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방재국장 박월훈)

1. 제 안 이 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자, 분양공고 및 과태료 부과, 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 변경 등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고지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 나.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다.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예순)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앞의 내용과 같음.

2.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당초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였으나, 이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하도록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계 법률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기 시행된 법률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고 환급해주지 않은 미환급액이 우리 시의 경우 200억원 정도 되어 추후 환급에 관한 관계 법률 제정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확보 등 환급과 관련한 재원마련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 의 요 지 : 생 략

Ⅴ.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